

본 자료는 11.18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보도자료 (산업자원부 공보관실)	담당과	자원정책과
		담당자	김정관 과 장 서기웅 사무관
		전화번호	2110-5415
천리안 · 하이텔 : go epic, 나우누리 : go mocie, 인터넷 : www.mocie.go.kr			

“산자부,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에너지산업부문 대응책 마련에 나서”

- 산자부는 교토의정서가 내년초에 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산업계 업종별대책반을 구성·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힘
 - 내년말 제1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내년 상반기 까지 **협상대책을 마련하고,**
 -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**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내년초까지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며,**
 - 온실가스 통계 정비,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체계 마련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임
- 한편,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1월중 산자부내에 「기후변화협약대책단」(단장 : 자원정책실장)을 만들어 운영하여, 그 안에 발전 등 에너지多소비업종을 대상으로 산업계 민관합동 업종별대책반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

○ **업종별대책만** **가**

8

산자부·전문가·협회·주요기업 등으로 구성

* 8대업종 : 발전·정유·철강·석유화학·시멘트·제지·자동차·반도체

- 산자부 관련과장과 협회임원(상근부회장)이 공동 반장을 맡아 운영하며,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2007까지 업종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게 됨

□ 산자부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활동이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,

* 우리나라가 2013~2017년중 1995년 대비 배출량을 5% 감축할 경우, 실질GNP 성장률이 2015년에 약 0.78%p 감소(예: 성장률이 4.39%인 경우 → 3.61% 성장, 2000년을 기준연도로 동일한 의무부담시 약0.47%p 감소 예상 (에너지경제연구원))

- 특히, 온실가스가 주로 에너지부문(총배출량의 83.4%, '02기준)에서 발생하므로 에너지부문에 가장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

* 부문별 배출('02) : 에너지(83.4%), 산업공정(10.9%), 농축산(2.9%), 폐기물(2.8%)

- 금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,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현실화되더라도 우리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지 않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힘

<붙임> 교토의정서 발효전망에 따른 에너지산업부문 대응책

< 붙임 >

교토의정서 발효 전망에 따른
에너지·산업 부문 대응책

2004. 11

산 업 자 원 부



· 대외여건	1
· 국민경제적 파급효과	2
· 추진과제	3
· 추진계획	4
1. 의무부담 협상대책 수립	4
2.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대책 수립·시행	5
3. 온실가스 감축기반의 지속 구축	6
4. 기후변화협약대책단 구성·운영	7
< 별첨 1 > 제10차 당사국총회 참석 및 대응	10
< 별첨 2 > 기후변화협약대응 세미나 개최	11

I. 대외여건

□ '04.11.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서명으로 러시아의 비준 절차가 종료

○ 이에 따라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2005년초에 발효될 전망

- *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국의 CO₂ 배출량('90기준) 합계가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55%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후 발효
- * 10월 현재 126개국 비준, 비준국의 CO₂ 배출량이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44.2%로 교토의정서 발효는 러시아(17.4%, '90)의 비준 여부에 의존

<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>

- 선진국(협약 부속서1국가, 한국 제외)은 1차 이행기간('08-'12년) '90년 대비 온실가스를 평균 5.2% 감축(국가별 감축량은 상이)
-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시장체제(교토메카니즘 : 배출권 거래제, 공동이행제도, 청정개발체제) 인정

□ 교토의정서 발효시 '05년부터 제2차 이행기간('13-'17)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

○ 온실가스 多배출국이며 OECD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의무 동참 압력 가중 예상

-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'90~'02간 연평균 5.1% 증가,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9위('02)

* 배출추이(단위:백만TC) : 78.2('90)→117.6('95)→134.1('00)→144.9('02)

II. 국민경제적 파급효과

□ 의무부담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활동에
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

○ 2차 이행기간('13-'17)중 '95년 대비 배출량을 5% 감축할
경우 실질 GNP성장률이 2015년에 약 0.78%p 감소 예상

* 예 : 2015년 성장률이 4.39%인 경우 0.78% 감소한 3.61% 성장

- '00년을 기준연도로 동일한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, 실질
GNP성장률은 2015년에 약 0.47%p 감소 예상(예정연)

*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한계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 감축
보다는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온실가스는 주로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므로 감축 의무
부담시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

* 부문별 배출('02) : 에너지(83.4%), 산업공정(10.9%), 농축산(2.9%), 폐기물(2.8%)

○ 에너지부문은 산업(33.9%), 수송(20.1%), 가정상업(13.1%),
전환(31.0%) 등 전부문에서 발생

○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, 석탄 등 화석연료의
사용에 대한 제약이 예상

· 주요 추진과제

- ◇ 정부 및 기업의 효율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 구축
- ◇ 제2차 의무부담 협상일정 구체화에 따른 협상대책 및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대책 등의 수립·시행

의무부담 협상에의 적극 대응

-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2차 이행기간 의무부담 협상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'05년 상반기까지 협상대책 마련

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수립 추진

-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3차 범정부 종합대책('05~'07)을 '05.2월까지 수립

기후변화협약 이행 기반의 지속적 구축

- 온실가스 통계, 감축실적의 등록관리,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

에너지산업부문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조직 강화

- 산자부내에 온실가스 의무부담 협상, 감축대책, 기반구축 등을 전담할 기후변화협약대책단을 구성·운영
- 국내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유지·확보를 위한 업종별 (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) 민관합동 대응 체계도 구축

IV. 과제별 추진계획

1 | 의무부담 협상 대책 수립

목표

- 감축정도, 시기 등과 결합된 각 의무부담 방식별 시나리오 구성, 시나리오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협상 대응 논리 개발

기본방향

-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의무부담 방안 견지

추진체계

- 현행 협상대책반의 활용 및 필요시 확대 개편
 - * '04.2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, 환경정책평가연구원, 에너지 관리공단,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상대책 T/F 구성·운영중

□ 추진방식

- 매월 1회 협상대책팀 회의 개최 운영
- 비공개 유지 및 자료 보안 관리 유지

□ 향후일정

- 금년말까지 의무부담 방식 등 기초자료 분석 완료하고, '05.상반기까지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및 대응논리 개발

※ 금년 12월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참석하여 협상논의동향 파악(별첨1)

□ 목표

- '05.2월말까지 기후변화협약 협약 대응 제2차 대책('02~'04)에 이은 제3차 범정부 종합대책('05~'07)을 수립(국조실 총괄)
- 산자부는 에너지산업부문 대책을 '04.12월말까지 마련

□ 기본방향

- 기반구축과 감축대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, 감축대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계량화 도모

□ 추진체계 및 방식 : Top-down 방식

- 에경연·에관공 협조하 감축대책팀에서 초안 마련
- 산자부 관련 실국(자원정책실, 차관보실)에서 검토 보완

□ 추진일정

- '03.12, 주요 선진국의 감축정책 및 조치 분석(에경연)
- '04.11.10, 기존 정책수단 선별 및 신규발굴
- '04.11말, 정책수단별 추진계획 수립 및 계량화
- '04.12말, 에너지산업부문 대책 완성(국조실 제출)

* 국무조정실이 각부처 대책을 종합('05.1)하여 기후변화협약실무조정회의('05.2)를 거쳐, '05.2월말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에서 심의·확정

□ 추진체계

- 에너지관리공단에 유관기관, 정부,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**기반구축팀**(팀장: 기후변화협약대책본부장)을 구성·운영

□ 부문별 주요 추진내용

① 통계 기반

- 구축중인 에너지기술DB(01~05)를 바탕으로 감축잠재량 도출(05~06)
-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 지침 마련(04~05) 등

② 감축실적 평가 및 등록체계

- 감축사업 등록 및 평가·인증 실시(06) 및 감축실적(Credit) 정부구매제도 도입(06년예산 반영 추진) 등

③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마련

- 청정개발체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유망 국내 청정개발 사업 분야 발굴 추진 및 배출권거래제 활용기반 연구 등

④ 교육 및 홍보 강화

- 산업계, 일반시민,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
 - 업종별단체(8)와 함께 각각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세미나 개최 및 홍보책자 발간·배포, 지자체별 순회교육 프로그램 추진

※ 금년 11.23(화) COEX에서 민관합동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 개최(별첨 2)

□ 목표

- 금년 11월중 에너지산업부문의 효율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대책단 구성·운영

□ 구성 및 운영체계

- 단장(자원정책실장) 아래 기능별 및 업종별 조직 구성
 - 기능별 조직 : ①협상대책팀('04.2월 既구성), ②감축대책팀, ③기반구축팀
 - 업종별 조직 : ①발전, ②정유, ~ ⑧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8개 업종별대책반
- 기능 조직은 각각 협상대책 수립, 감축정책의 수립·집행 및 기반구축을 수행하며, 업종별대책반의 활동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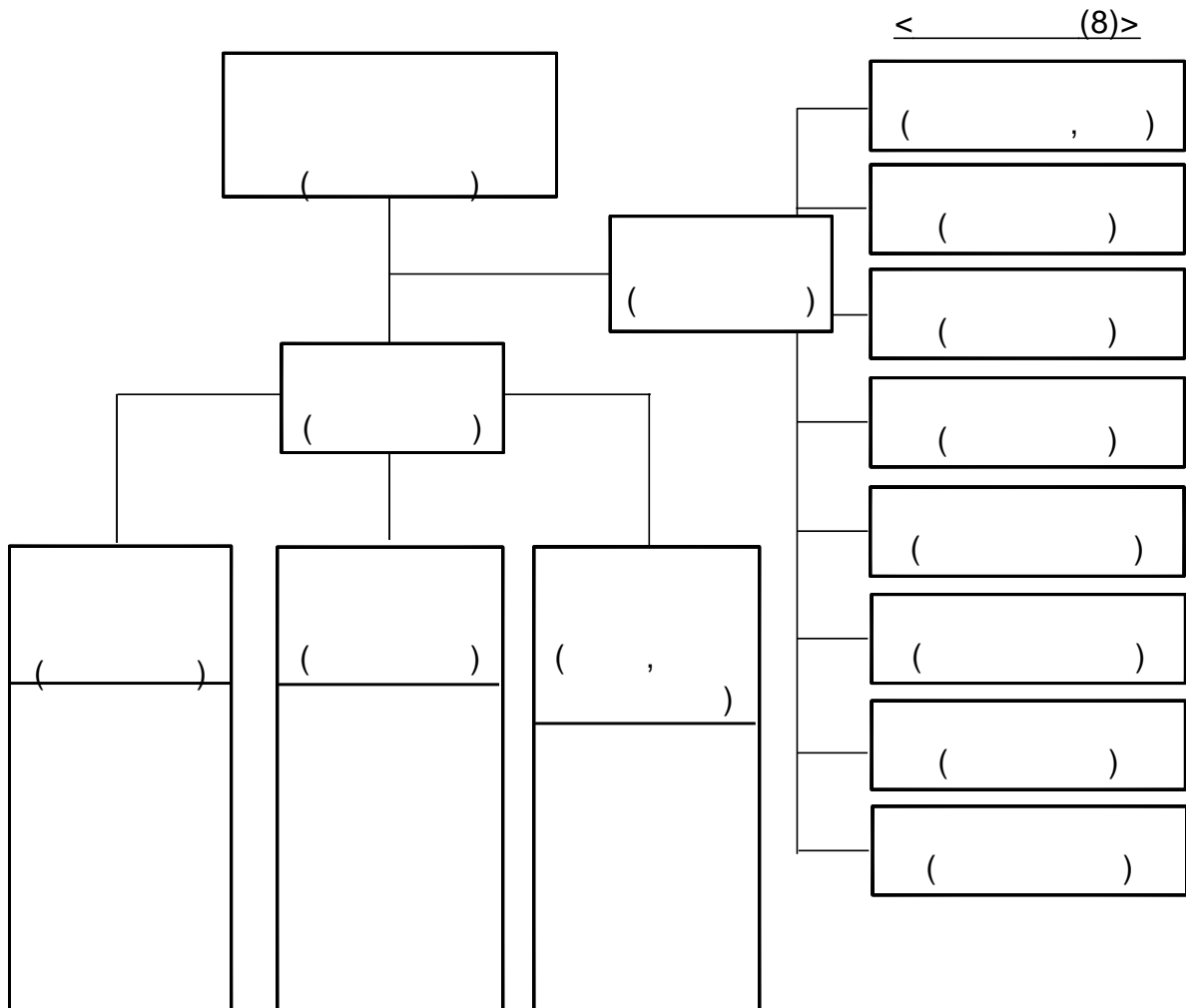
□ 기능별 조직

- 팀장 : 관련과 담당과장(단, 기반구축팀장은 예관공 담당임원)
- 팀원 : 예경연, 예관공, 학계 및 산업계 등 10명 내외
- 활동 : 각각 협상대책, 감축대책 수립 및 기반구축 추진
- 운영 : 매월 1회 정기적 회의 개최하여 활동 상황 점검

□ 업종별대책반

- 반장 : 담당과장, 관련협회 상근부회장 공동
- 반원 : 사무관, 협회, 예관공, 학계, 주요기업 등 10명 내외
- 활동 : 협약대응 홍보·교육, 감축방안 수립·시행 등
- 운영 : 분기별 1회 개최

< 기후변화협약대책단 구성(안) >



< 업종별 대책반 구성·운영(案) >

추진목표

- 금년 11월중 의무부담시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·확보를 위한 에너지다소비 업종별(8대업종)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성

구성(안)

- 주관 : **업종별 담당과**(총괄 : 자원정책과)
- 구성 : 산자부, 에관공, 협회, 주요기업, 전문가 등 10인 내외
(반장 : 담당과장, 협회부회장 공동)

업종	발전	정유	철강	석유화학
부서	총괄정책과 전력과	석유과	기초과	기초과
협회	간사	석유협회	철강협회	석유화학
기업	발전사 5사	SK, LG 등	포철 등	LG 등

업종	시멘트	제지	자동차	반도체
부서	생물화학	생물화학과	수송기계과	반도체과
협회	양회협회	제지협회	자동차협회	반도체협회
기업	쌍용 등	한솔 등	현대, GM대우 등	삼성하이닉스

☐ 활동내용

- 궁극적 목표 : **2007년까지 업종별 자발적 감축계획 수립**
(예 : 일본 경단련 Voluntary Action Plan)
- 연차별 사업내용

1차연도('05)	2차연도('06)	3차연도('07)
•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개발('05)	• 업종별 저감 잠재량 도출 ('05~'07) •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대책수립 ('05~'07)	
• 업종별 기후협약 대응 자체 홍보 및 세미나 • 업종별 국내외 산업계 대응현황 파악 및 관련 기반 구축		

☐ 추진일정 : 대책반 구성('04.11), 대책반별 운영계획 수립('05.1말)

<별첨1>

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참석 및 대응

제10차 당사국총회('04.12.6 ~ 18)에 참가하여 제2차 의무 부담 협상 논의 동향 파악 및 주요 의제별 협상 참여

* 산자부 참석자 : 자원정책과장(출장: 12.9~12.20), 사무관(12.3~12.20),
에경연(2) 및 에관공 전문가(2) 등 6명 참석(수석대표 : 환경부장관)

☐ 주요 의제별 협상참가 및 주요국과의 양자 회의 개최

- 국가보고서, 기술이전,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산업자원부 소관 주요의제 협상에 참가하여 우리 입장 반영 추진
- 미국·호주·멕시코 등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및 다자회의 개최를 통해 정보공유 및 대외 협력 강화

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대·내외 홍보

-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및 사례 소개 (에관공, 한전, 가스공사 등)

☐ 산업계 등의 활동 지원

- 대한상의, 발전회사, 포스코 등 산업계 참가자 활동 지원

* 산업계에서 대한상의 등 15명내외 참석 예정

-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에 의한 우수논문 선발 학생(9명) 현장 방문 지원

<별첨 2>

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 개최

◇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국민, 기업의 인식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 개최

장소 및 일시 : 코엑스 '04.11.23(화) 14:00~17:30

주최 : 산자부, 에관공, 에경연 / 후원 : 대한상의, 전경련, 중기협

대상 : 기업(중소, 중견기업), 일반 시민

행사진행

- 개회사 : 산자부 자원정책실장
- 축 사 :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

Session 1 (좌장 : 노종환 실장, 에관공)

시 간	발 표 제 목	발표자(안)	지정토론자(안)
14:00-14:20	기후변화협약과 대응전략	에경연(강운영)	○ 외교부 환경협력과 유연철 과장
14:20-14:40	정부의 협약대응 정책	산자부(김정관)	
14:40-15:00	국내 대응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과제	에관공(오대균)	○ 에너지기술연구소 신성철 박사
15:00-15:30	(지정 및 자유 토론)		

Session 2 (좌장 : 김정인 교수, 중앙대)

시 간	발 표 제 목	발표자(안)	지정토론자(안)
16:00-16:20	산업계의 대응 방안	가스공사(김효선)	○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
16:20-16:40	기업의 대응사례(SK(주))	SK(조중래)	
16:40-17:00	시민단체의 기후변화 대응활동	에너지대안센터 (이상훈)	○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진 박사
17:00-17:30	(지정 및 자유 토론)		

< 참고 >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

◇ 기후협약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('94.3 발효)

공통의무 :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시책의 자체적 수립·시행 + 온실가스 배출량·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·제출

특정의무 : **부속서** , **부속서** 국가로 구분(한국: **비부속서**)

·부속서 (40개국과 EC) : '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'90수준으로 안정화(비구속)

·부속서 (부속서 국가중 24개국+EC):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의무

◇ 교토의정서는 '97.12월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선진국 (한국 미포함)의 구속적 감축 의무를 규정한 합의 문서(미발효)

감축대상 온실가스 : CO₂, CH₄, N₂O, PFCs, HFCs, SF₆ 등 6개 규정

의무부담 내용 : 선진 38개국(부속서 중 터키, 벨라루스 제외)은 제1차 의무 부담 이행기간('08 '12)동안 '90대비 동 의무 부담국가 전체 평균 5.2%를 감축[국가별로 차별화(8 +10)]

* EU: 8% 미국: 7% 일본: 6% 러시아: 0% 아이슬란드: +10%

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 : 공동이행제도, 청정개발체제,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토메카니즘 도입

* 배출권거래제 :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

* 청정개발체제 :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(선진국)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

* 공동이행제도 :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(투자국)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

발효요건 :) 55개국 이상 비준과,) 동 비준국의 이산화탄소(CO₂) 배출량('90 기준) 합계가 부속서 I 국가 전체 배출량('90)의 55% 이상인 시점부터 3개월 후 발효

◇ 교토의정서 발효시 2005년부터 제2차 이행기간('13~17)에 대한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